

민주노총 대대 경사노위 안건 유회

노동자들이 정부에 화났음을 반영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투쟁을 우선하라



김재이 기자

미국발 증시 폭락과
무역 전쟁
또다시 경제 공황이
밀어닥칠 것인가?

6면

민주노총 대대 유회
많은 조합원들이
'사회적 대화'를
무언으로 반대하다

3면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2)

4~5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사우디 언론인 피살로
드러난 복잡한 중동 상황

5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하라

8면

노동자 투쟁

잡월드 노동자 파업 3면

한국지엠노조 파업 결의 2면

철도노조 2면

초등돌봄 노동자들 7면

전교조 7면

LGU+비정규직 7면

8000억 지원받고 겨우 5개월 만에 구조조정 추진하는 한국GM

박설

한국GM이 연구개발 부문(기술연구소, 디자인센터, 파워트레인 등)을 별도의 회사로 떼어내는 법인 분리 절차에 돌입했다. 10월 4일 이사회 결의에 이어 19일 주주총회에서 이를 확정했다. 사측의 계획대로라면 12월 초 새로운 회사가 만들어진다.

한국GM 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78.2퍼센트의 높은 지지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동자들의 불만이 상당함을 보여 준다.

연구개발은 완성차 기업의 세계시장 경쟁력에 필수적인 부문이다. 치열한 판매 경쟁 때문에 빠른 속도로 신차를 출시하고 새로운 기술을 선보여야 할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자동차 기업들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이 부문을 떼어내겠다는 것은 GM의 한국 공장 위상을 낮추고 생산을 축소하는 계획 속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법인이 분리되면 공장 철수도 좀더 용이해질 수 있다. 앞으로 더 큰 구조조정의 한파가 몰아칠 수 있는 것이다.

분리된 연구개발 회사는 법적으로 기존의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도 되고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사측은 이미 단협 적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보호망도 없이 조건 후퇴 압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은 한국GM이 정부



회생자금을 댄 산업은행은 한국GM의 협박에 무기력하게 대응할 뿐이었다. 노동자들 스스로 국유화 투쟁에 나서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

로부터 8100억 원을 지원받은 지 5개월 만에 신속히 이뤄졌다. GM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대신 한국 공장에서 신차종을 생산하는 등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합의서에 잉크가 마르기기도 전에 뒤통수를 친 것이다. 지금 한국GM은 연구개발 부문 법인 분리뿐 아니라, 정비사업소 외주화, 비정규직 해고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예상치 못한 돌발 사태는 아니다. 최근 폭로된 것을 보면, 정부와 GM 사이에 협상이 체결된 5월 이전에

이미 GM은 정부에 법인 분리 의사를 내비쳤다.

무엇보다 본지가 거듭 주장했듯이, 정부가 자금 지원과 특허 제공으로 GM을 한동안 붙잡을 수 있더라도 그것은 미봉책일 수 있다. GM이 여러 나라들에서 공장 철수를 협박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과 노조의 임금 양보를 얻어 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뒤통수를 치고 철수해 온 사례가 많다.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법인 분리에 반대한다며 주주총회 금

지 가져분 신청을 내고 비토권 행사 의사를 밝혔지만, 어떤 효과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고작 이것뿐인 것은 아니다.

정부는 경제 불황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지역 주민들의 삶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GM이 일자리를 쥐고 흔들며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 악화를 위협하는 상황을 방지해선 안 된다.

GM이 한국 공장을 축소하고 철수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

접 나서 한국GM을 인수하고 운영해(국유기업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국유화는 결코 비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다. GM은 애초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며 한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지원 받았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또다시 수천억 원을 지원 받았다. 이런 돈은 GM 사용자 측의 배를 불리는 데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여야 마땅하다.

철도 — 코레일은 임금 삭감 중단하라

이정원

철도 노동자들이 올해도 사측의 임금 삭감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정부 아래서 노동자들이 (결국은 성공한) 성과연봉제 저지에 그토록 애썼던 이유 하나는 임금 삭감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결국 철도 파업이 정권 퇴진 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그런데 새 정부 하에서도 임금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철도공사 사측은 올해도 인건비가 980억 원 부족하다며 임금 동결, 수당 삭감 등을 강요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사측은 기본급을 3.5퍼센트 올리면서 미사용 연가 보상비를 1인당 4개씩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족한 인건비 문제를 때웠다.

고령 노동자들과 신입 노동자들의 피해는 더 크다. 고령 노동자들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돼 퇴직 전 2년 동안 40퍼센트 깎인 임금을 받고 있다. 신규 노동자들은 기존 직원이 받는 수당 일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승진 적체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도 불만이다. 승진으로 얻는 임금 인상 효과를 전혀 못 보기 때문이다.

현장의 인력 부족은 고려하지 않고 초과근로 억제에만 힘쓰는 것에서도 사측이 인건비를 줄이는 데 얼마나 혈안인지 잘 드러난다. 그 결과는 인력 부족 탓에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임금 억제 압박이 심해 노동자들의 불만이 크다. 민주당 '386 의원' 출신인 철도공사 오영식 사장은, 노동자들의 임금과 조건 개선에 인색하기로는 전임 사장들과 판박이다.

오영식 사장은 공공성 강화를 말하면서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조건은 악화시키고 있다. 지독한 모순이다.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서비스 제공 노동자들에게 관철은 조건과 처우를 제공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 저지 염원은 공공성 강화와 대립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문재인 정부의 임금 억제 정책

그런데 철도공사 사측은 책정된 인건비가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사측이 정부 핑계만 대는 것은 문제이지만,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가 임금·인력 억제다.

그동안 역대 정부들 모두 공공기관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인력과 인건비가 늘지 못하게 통제해 왔다. 세세한 지침을 통해 책정된 총액인건비를 초과해 인건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철도공사에는 대규모 정원 감축과 직급별 정원 통제까지 도입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폐지할 생각이 전혀 없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도 거부했다. 심지어 그동안 정부가 지원해 온 임금피크제 지원금(1인당 연간 최대 1080만 원) 지급도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영터리로 전락한 것도 이런 '돈 안 쓰는 정책'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단지 기획재정부 관료 집단의 '적폐' 때문에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은 세계경제의 불안정성 증대와 국내 고용률·투자율 감소 등과 같은 만만찮은 경제 상황을 친시장적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살리기로 대처하려고 한다.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금 억제 등 노동계급을 공격하는 조처들을 추진하려는 이유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직무(성과)급제 도입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공정 임금'을 명분으로 추진하는 임금체계 개편의 목적은 호봉제를 폐지해 임금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철도 노동자들이 당면한 임금 삭감을 저지하기 위해서도 만만치 않은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0월 18일 철도노조 파업찬반투표는 찬성 68.7퍼센트로 가결됐다. 철도노조는 사측이 물러서지 않으면 11월 초 시한부 파업을 한다는 계획이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노동자들의

기존 조건을 지키려 해도 단호하게 투쟁해야 한다.

정부나 기업주들도 단호하게 나올 것이므로 노동자들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각별히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철도노조 집행부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자 처우 교섭에서 차별을 두는 후퇴안을 내놓은 것은 단결을 약화시켜 사측에 맞서 싸울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 철도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처우에 반대하며 연대해야 한다. 그래야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질하는 사측에 맞서 투쟁을 확대할 수 있다.

놓치면 후회할 온라인 기사

wspaper.org

★ 한국이주인권센터 박정형 활동가:
“예멘 난민들이 혐오 대상이 된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

★ ‘헬프 시리아’ 압둘 와합 사무국장:
“난민에 연대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활동하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압둘 와합 사무국장과 박정형 활동가가 한국에 온 난민들의 이야기와 한국 정부 정책의 문제점 등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wspaper.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유회

많은 조합원들이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함을 반영하다 멀찍이 미뤄둔 총파업을 당겨야 한다

10월 17일 민주노총 정책대의원 회대회가 개최됐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 안건을 다루지 못한 채 유회됐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정부·기업인들과의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하려 했으나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정책대의원대회의 무산은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경사노위 참여에 냉담하고, 경사노위 참여에 열을 내는 집행부 노선에 불만이 많음을 보여 준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문재인 정부의 경사노위 참여 압박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강력한 참여 의지 표명 속에서 개최됐다. 김명환 위원장은 대의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했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어떻게든 대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했었다. 그럼에도 유회라는 결과가 나온 것은 기층 조합원들의 불만이 많음을 보여 준다.

민주노총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우향우 행보를 지속하며 노동자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하고 불만이 쌓여 왔다. 최저임금 쟁다 뺏기, 영터리로 전락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일자리 학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 외면, 규제프리존법 통과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하반기 국회에서는 최저임금법 추가 개악, 탄력근로제 개악 등도 추진될 위험이 크다.



10월 17일 민주노총 임시(정책)대의원대회는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지지를 얻지 못한 사회적 대화 노선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노총 집행부는 “지금이 경사노위 참여 적기”라는 주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호응을 얻지 못했다. 경사노위 참여를 통한 사회개혁 노선은 조합원들의 열의를 끌어 내지 못한 것이다.

정족수 미달은 경사노위 참여 결정이 주요 안건인 이번 대의원대회에 상당수 대의원들이 참석에 열의가 없었음을 보여 준다. “경사노위 참여 적기”라는 주장이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음은 대의원대회 분임토론 과정에서도 감지됐다. 집행부는 경사노위 참가를 설득하려 했지만, 이에 대한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최저임금이 개악됐을 때 모든 위원회에서 나오고 투쟁을 강화했어야 했다.” “민주노총 파업을 한 달여 남기고 경사노위 복귀 논란으로 혼란을 야기해야 하나?” “지금 싸우고 있는 노조가 한두 곳이 아니고 투쟁 동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집행부는 투쟁할 힘이 없다고 하는가?”

경사노위 참여 반대 목소리가 점

점 커진 데는 민주노총 좌파의 기여도 컸다. 노동자연대 등을 비롯한 좌파 단체들은 9월 초부터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 결정을 비판하며 투쟁의 조직에 힘을 쏟으라고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대의원대회를 앞두고는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대의원 성명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분위기 속에서 좌파들의 호소는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노사정위 참가 안건 부결 분위기를 확인시키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한 것이다. 정책대의원대회 당일에는 민주노총 대의원 100명을 비롯해 730명의 활동가들이 연서명한 ‘경사노위 참가 반대’ 성명서가 반포됐다.

대의원대회 유회 이후 과제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가가 지지를 얻기는커녕 오히려 상당한 불만이 있음이 확인된 만큼,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금 당장 투쟁을 선언해야 한다. 파업을 앞당겨도 부족한 상황에서 두 길 보기로 시간을 낭비한 면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우향우 행보는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경제 상황 악화 속에 문재인 정부는 노동계급을 공격하는 친기업 정책을 지속해 가려 한다. 시장 지향적 규제완화를 통한 ‘혁신성장’은 이를 위한 것이고,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력 제고가 목표다. 임금 억제가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와 파트너십 갖기를 통한 (불가능한) 개혁 추구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대중 투쟁으로 개선을 쟁취해야 한다.

투쟁 선언이 단지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이 되려면 기층의 투쟁적인 활동가들이 이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경사노위 불참 자체로 충분하지 않다. 경사노위에 참가하지 말자는 것은 거기에 발목 잡히지 않고 투쟁하기 위해서다.

이 글은 10월 18일에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자회사 강행에 맞서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다

10월 19일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이 자회사 설립에 맞서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성남시 분당에 있는 한국잡월드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과로 내세우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이 영터리임이 분명해지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까지 나서게 된 것이다.

종합직업체험시설인 한국잡월드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으로, 2012년 개관 이래 전체 노동자 380여 명 중 50명만 정규직이고 나머지 노동자들은 모두 간접고용 비정규직(용역, 파견)이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려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몬 것이다.

1년 전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 대책을 말했을 때 한국잡월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큰 기대를 품었다.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는 말뿐이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은 직접고용뿐 아니라 자회사 방안도 “정규직 전환 방식”이라고 제시했다.

이렇게 정부가 돈 안 들이고 생색내려고 자회사 방안을 정규직화인 것처럼 포장한 덕분에 한국잡월드는 마음껏 자회사를 밀어붙일 수 있었다. 사측은 간접고용 노동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강사 직군(275명)의 의견을 묵살하고 올해 4월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 자회사 방안을 밀어붙였다.

강사 직군 노동자들은 비민주적으로 진행된 노사전문가협의체 결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자회사는 꼼수”라며 노조를 결성해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투쟁에 나섰다.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자회사 방안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알려져,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그런데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잡월드

이사장 노경란은 자회사 방안이 “민주적”으로 결정됐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반복했다. 게다가 마치 강사 직군 노조 대표와 함께 좋은 자회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식으로 황당한 주장을 폈다.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은 국정감사에 맞춰 파업을 하고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말이다.

사기극으로 드러난 “좋은 자회사” 방안

사측은 노동조건이 개선되고 고용이 보장되는 “좋은 자회사”를 설립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구체적 노동조건도 밝히지 않은 채 자회사 전환 채용에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해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시설, 경비, 청소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자회사 1차 채용 면접 합격자 발표가 나고서야 급여체계가 나왔다. 박영희 한국잡월드 분회장은 “자회사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복지 급여는 고작 식대 13만 원에 명절 상여금 80만 원(설, 추석 각 40만 원), 복지포인트 40만 원이다. 정규직 전환이 되면 마땅히 받아야 하는 항목인데도, 사측은 자회사 전환으로 복지 수준이 높아진 양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식대는 최저임금 산업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내년 임금도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이다.

한 강사 노동자는 자회사 임금체계로는 처우 개선되는 게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식대는 그동안 8만 원씩 지원됐다. 복지포인트도 지급돼 오던 거다. 자회사에 채용되면 신규 사원이 되는데 현재 15일 받고 있는 연차가 오히려 11일로 줄어든다.” 어린이체험관에서 일하는 강사 노동자들은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임금이 보전되지 않아 월급이 16만 원 깎였다.

실상이 이런데도 사측은 강사 직군 노동자들에게 자회사 채용에 응하라고 협박하고 있다. 강사 직군이 포함된

2차 채용 대상자들은 289명이다. 자회사 전환 절차에 따르면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채용 공고 기간이다.

강사 직군 노동자들은 사측이 제시한 자회사 채용을 거부하고 무기한 전면 파업으로 맞서고 있다. 이진형 한국잡월드 부분회장은 이렇게 투쟁의지를 보였다.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장이 21일간 단식을 해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아도 한국잡월드는 꿈쩍하지 않는다. 자회사 방안은 완전 껌데기다. 도저히 채용에 응시킬 수 없다. 12월 말에 해고된다 해도 끝까지 투쟁하겠다.”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파업은 다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자회사 전환에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극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의 파업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강철구

기획 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본지는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에 관해 다음 순서로 네 차례에 걸쳐 연재하려 한다.

- 1) 4차 산업혁명이라는 범석을 때는 이유
- 2)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허풍
- 3) 분권화된 네트워크형 새로운 자본주의?
- 4) 디지털 플랫폼과 노동의 성격 변화?
- 5)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까?
- 6) 기술 혁신과 노동자들의 처지
- 7) 노동조합 투사들은 기술 혁신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조직노동자운동 팀장

분권화된 네트워크형 새로운 자본주의?

4차 산업혁명론은 사회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동한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이처럼 기술 발전이 저질러 사회 변동을 가져온다는 생각을 기술결정론이라고 한다. 마르크스주의를 기술결정론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마르크스는 이런 견해를 배격했다.

많은 사회학자들과 미래학자들, 심지어 일부 좌파들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현대 사회의 경제와 노동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 때문에 독점과 위계가 지배하던 자본주의가 분권화된 네트워크형 경제로 변한다든지, 노동에 바탕을 둔 사회가 종말을 고하게 된다는 것이 그런 주장들이다.

그러나 정보통신 분야 산업을 보더라도 분권화된 네트워크는커녕 고도로 집중된 경제를 목도하게 된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거대기업이 이 분야 산업을 지배하고 있다.

인터넷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개방된 공간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소수 대기업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지배하며 엄청난 수익을 올린다. 그들의 사업 운영 방식은 전혀 개방적이지 않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는 운영체제를 개발하고 시장을 지배하는 방식은 이 점을 잘 보여 주는 사례다.

디지털 플랫폼과 노동의 성격 변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덕분에 사람들의 필요를 알아 내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는 신화로 널리 퍼져 있다. 사람과 사물 간 연결성이 극대화되면서, 정보를 종합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사업을 재배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소비가 가능해지고, 대량 생산 시스템에 맞춰진 낭비적인 대량 소비를 지양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그런 연결성을 구현하는 장으로 디지털 플랫폼이 주목받으면서 새로운 사업 모델로 떠올랐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랫폼 기업들로는 우버(택시), 에어비앤비(숙박 중개), 딜리버루(배달)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배달의민

정보통신 분야를 지배하는 대기업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자신이 보유한 플랫폼을 폐쇄적으로 운영한다. 애플이 자사 제품들만 서로 연동되도록 폐쇄적인 플랫폼을 구축한 것은 유명하다. 흔히 구글은 반대 사례로 알려져 있다. 안드로이드(스마트폰 운영체제)를 개방해 휴대폰 개발자들의 참여를 허용한 것이 성공 비결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구글도 극히 일부 영역만 개방했을 뿐,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핵심을 폐쇄적으로 관리하기는 마찬가지다.

물론 오픈소스 프로그래밍이 소프트웨어 혁신에 도움이 되기는 했다. 하지만 시장을 지배하고 이익을 거둔 것은 대기업들이다. 대기업의 이윤 추구를 우회해 개인간 “공유”를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개방적인 경제 질서를 만들 것으로 기대됐던 기술들은 얼마 못 가 기존 체제에 짓밟혀 사라지거나 기존 체제로 흡수됐다.

음악파일 공유 서비스가 그런 경우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 하나라는 블루체인은 또 다른 사례다. 블루체인은 기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간 직접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발된 혁신 기술로 알려졌다. 그런데 최근에는 기존 금융기관들이 여러 금융기관들 사이의 결제 시간을 줄이고자 블록체인을 채택하고 있다.

우버 택시는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플랫폼 회사다. GPS와 연결해 택시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소비가 가능해지고, 대량 생산 시스템에 맞춰진 낭비적인 대량 소비를 지양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그런 연결성을 구현하는 장으로 디지털 플랫폼이 주목받으면서 새로운 사업 모델로 떠올랐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랫폼 기업들로는 우버(택시), 에어비앤비(숙박 중개), 딜리버루(배달)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배달의민



대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정보통신 산업. 분권화된 네트워크 자본주의? 독점으로 향하는 경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이 어느 때보다 빠르게 대 기업을 추월할 수 있다고들 하지만, 이것은 신화일 뿐이다. 미국에서 창업한 지 5년 미만인 신생 기업의 비율은 1978년 14.6퍼센트에서 2011년 8.3퍼센트로 더 줄었다. 한국에서는 신생률이 이보다 조금 높지만 생존률은 훨씬 낮다. 무역협회 보고서를 보면 한국 신생 기업의 5년 생존률은 27퍼센트에 불과하다(2015년 기준). 과학·기술형 창업의 경우도 33퍼센트로, 별 차이가 없다.

대기업은 혁신 기업의 기술을 빼앗거나 아예 그 기업을 인수·합병하면서 지배력을 키우고 있다. 정보통신 분야도 마찬가지다.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나 구글의 유튜브와 안드로이드 인수가 그런 사례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기술 흡수를 위한 인수·합병도 수없이 진행되고 있다.

요컨대, 권력이 분산되지는커녕, 강한 기업이 약한 기업을 집어삼키며 독점으로 향하는 경향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에어비앤비는 “건물 하나 없는 세계 최대 숙박 회사라거나 우버는 ‘택시 하나 기사 한 명 없는 세계 최대 택시 회사’라는 널리 통용되는 정의가 뜻하는 바다. 즉,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제 기업들은 이윤 창출을 위해 노동자를 고용하고 노동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플랫폼 기업들은 자신이 노동자들을 고용한 게 아니고 단지 노동 공급자를 고객과 연결해 주는 구실을 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노동 공급자는 자기 회사에 소속된 피고용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개인 사업자”라는 것이다. 그들은 회사에 일매이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일하고 있다면서 말이다.

그러나 어떤 디지털 플랫폼도 자본주의 경제의 무정부적 속성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똑똑한 알고리즘도 자본주의의 본질에서 비롯된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재인은 4차 산업혁명을 예찬하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보장 요구를 외면해 왔다

노동자에서 독립 자영업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전에는 사업을 하려면 건물이나 기계 같은 유형자산과 노동자 고용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디지털 플랫폼 덕분에 이 모든 것이 불필요해졌다고 주장한다. 플랫폼 기업들의 가치 창출 원천은 고용된 노동자의 노동이 아니라 “초연결성” 자체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에어비앤비는 “건물 하나 없는 세계 최대 숙박 회사라거나 우버는 ‘택시 하나 기사 한 명 없는 세계 최대 택시 회사’라는 널리 통용되는 정의가 뜻하는 바다. 즉,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제 기업들은 이윤 창출을 위해 노동자를 고용하고 노동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플랫폼 기업들은 자신이 노동자들을 고용한 게 아니고 단지 노동 공급자를 고객과 연결해 주는 구실을 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노동 공급자는 자기 회사에 소속된 피고용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개인 사업자”라는 것이다. 그들은 회사에 일매이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일하고 있다면서 말이다.

그러나 어떤 디지털 플랫폼도 자본주의 경제의 무정부적 속성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똑똑한 알고리즘도 자본주의의 본질에서 비롯된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플랫폼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이롭게

▶ 5면으로 이어짐



플랫폼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이 씹어놓은 기차 ‘자영업자’ 허울을 벗고 단결해 싸울 수 있다. 차우개선을 요구하며 집단체중에 나선 대리기사 노동자들(2018년 부산, 왼쪽)과 6일간의 파업으로 승리를 거둔 딜리버루 노동자들(2016년 영국, 오른쪽)

▶ 4면에서 이어짐

인 ‘자영업 사장’의 처지로 밀어넣는 이유는 자명하다. 최저임금과 노동 기본권 보장 같은 각종 고용 의무를 기피하려는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게재한 어느 최고경영자의 다음과 같은 환호는 플랫폼 노동이 제공한다든 독립과 자유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잘 보여 준다.

“이제 우리는 원하는 사람들,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고용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소속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가신 일이나 규

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 결과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의 주체화”라는 어처구니없는 포장과는 정반대로 열악한 처지에 내몰린다. 우리 나라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실태를 분석한 결과, “하루 기준 12시간, 주 6일 근로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토록 장시간 일해도 보험료, 운송수단 연료비와 유지비, 여기에 페널티까지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남은 게 전혀 충분치 않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평균

8,790원이고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도 12퍼센트로 집계됐다. (박찬익 외, 《일자리 형태의 다양화 추세와 산재보험》, 한국노동연구원) 플랫폼 노동자들은 자유롭게 일하기는커녕 대부분 노동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지 못하고, 언제 일할지, 언제 쉬는지를 통제당한다. 이 때문에 노동시간이 길어지고,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노동조건이 열악해진다. 노동자들이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에르도안은 점점 발을 빼고 있다. 미국이 시리아 내 쿠르드 민족주의 세력을 지원하면서 터키와 미국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2016년 7월 (에르도안에 맞선 터키 군부의 쿠데타가 실패한 후에 그 때 이후로 시작된) 쿠데타의 망명을 미국이 받아 준 뒤로, 에르도안은 미국에 불만을 표시해 왔다. 가령, 터키 정부는 쿠데타와 연결돼 있다는 혐의로 미국인 목사 앤드루 브랜슨을 수감했다.

“디지털 특고”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으로 전통적인 고용관계가 임시 계약관계로 대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플랫폼 경제에서는 고용자도 노동자도 없어서, 모두가 개인사업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노동운동 활동가들조차 유연 노동을 사이버 공간의 특성과 관련지어 보면서,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노동의 우버화”를 거스를 수 없다고 믿는다. 디지털 기술이 자본에게는 유토피아를, 노동에게는 파멸과 약탈을 운명을 선사했다고 말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귀결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이윤을 위한 자본가의 공세이다.

가령 우리 나라에서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으로 알려진 업무기(배달, 운전, 심부름 등)는 모두 기존 임금 노동자들이 수행했던 일이다. 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일하도록 하고, 결론하면 벌금을 물리고, 쿨을 잡지 않으면 위치를 확인해 쿨을 잡도록 재촉한다.

플랫폼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이롭게

자들은 피고용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고자 투쟁하고 있다. 2016년 영국 우버 택시 운전자들은 우버의 피고용자로서 유급휴가, 병가, 최저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판결을 얻어 냈다. 같은 해 영국 딜리버루 배달자들은 건강 급여 인하여 맞서 6일간의 단호한 파업으로 승리를 거뒀다.

한국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저항 가능성을 보여 주는 사례다.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업무가 수행되면서 이런 노동자들을 “디지털 특고”라고 부르기도 한다. 택배나 대리기사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 오랫동안 투쟁해 왔다.

디지털 플랫폼이 발전했다 해서 노동의 본질이 변한 것은 아니다. 자본가들은 항상 노동자들이 필요했다는 인상을 주려 하지만, 이윤을 내려면 노동자들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본질적인 관계는 변하지 않았고, 바로 이 점이 노동자들에게 이윤 체제에 맞서 싸울 능력을 부여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사우디 언론인 피살로 드러난 복잡한 중동 정세

서방 제국주의의 이해관계에 맞게 중동 정세를 관리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또다시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는 미국 자신을 비롯해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된 행위자들이다.

역사적으로 이 세 나라는 매우 긴밀했다. 터키는 나토의 핵심 회원국이며, 전체적 통치를 하는 사우디 왕가는 미국의 후원을 받는 가장 중요한 정권이다. 그러나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에 점차 금이 가고 있다.

이 둘은 [이슬람의 주요 종파인] 수니파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지도자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사우디 왕가는 줄곧 이슬람 최고 성지들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터키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이 이끄는 정의개발당(AKP)은 더 “현대적” 이슬람을 대표하려 한다.

이 지역에서 에르도안은 [이슬람주의의 한 세력인] 무슬림형제단과 동맹 관계인데, 사우디 왕가는 무슬림형제단을 과격 수니파라 비아 양국은 시리아 혁명을 수니파의 종파적 운동으로 변질시키려 경쟁적으로 애써 왔다. 양국 모두 이슬람 무장 세력을 후원했지만, 러시아가 개입해서 [시리아의]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편에 유리하게 세력 균형을 바꾸는 것을 막지 못했다.

그런데 에르도안은 점점 발을 빼고 있다. 미국이 시리아 내 쿠르드 민족주의 세력을 지원하면서 터키와 미국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2016년 7월 (에르도안에 맞선 터키 군부의 쿠데타가 실패한 후에 그 때 이후로 시작된) 쿠데타의 망명을 미국이 받아 준 뒤로, 에르도안은 미국에 불만을 표시해 왔다. 가령, 터키 정부는 쿠데타와 연결돼 있다는 혐의로 미국인 목사 앤드루 브랜슨을 수감했다.

2018년 8월 도널드 트럼프가 반격에 나섰다. 트럼프는 터키산 알루미늄과 강철에 대한 수입 관세를 감절토 올렸으며 [터키에 판매한]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 100대의 배치를 보류시켰다. [하지만] 터키 경제는 그전부터 압박을 받고 있었다. 터키 경제의 호황은 대규모 달러·유로 차관에 기댄 자산 거품 덕분이었다. 아르헨티나와 마찬가지로 터키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 에르도안은 오랫동안 터키 금리 인상을 반대해 왔음에도, 8월에는 리라화(₺) 가치 폭락 때문에 금리를 [기준 17.5퍼센트에서] 24퍼센트로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에르도안이 한 발 물러섰다. 9월 12일 터키 정부는 브란슨을 석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 [외교당국의] 압력에 굴복했다.” 그러나 미국 [외교당국의] 압력에 굴복했다. “그러나 미국 [외교당국의] 압력에 굴복했다.” 그러나 미국 [외교당국의] 압력에 굴복했다.

터키 정부는 사우디 왕가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사우디 왕가는 미국 제국주의의 혈맹 관계는 여전히 견지한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626호 / 번역 김준호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수교지를 남치·고문·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터키 정부는 카슈미르의 신체가 절단돼며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터키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이 이끄는 정의개발당(AKP)은 더 “현대적” 이슬람을 대표하려 한다.

이 지역에서 에르도안은 [이슬람주의의 한 세력인] 무슬림형제단과 동맹 관계인데, 사우디 왕가는 무슬림형제단을 과격 수니파라 비아 양국은 시리아 혁명을 수니파의 종파적 운동으로 변질시키려 경쟁적으로 애써 왔다. 양국 모두 이슬람 무장 세력을 후원했지만, 러시아가 개입해서 [시리아의]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편에 유리하게 세력 균형을 바꾸는 것을 막지 못했다.

그런데 에르도안은 점점 발을 빼고 있다. 미국이 시리아 내 쿠르드 민족주의 세력을 지원하면서 터키와 미국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2016년 7월 (에르도안에 맞선 터키 군부의 쿠데타가 실패한 후에 그 때 이후로 시작된) 쿠데타의 망명을 미국이 받아 준 뒤로, 에르도안은 미국에 불만을 표시해 왔다. 가령, 터키 정부는 쿠데타와 연결돼 있다는 혐의로 미국인 목사 앤드루 브랜슨을 수감했다.

2018년 8월 도널드 트럼프가 반격에 나섰다. 트럼프는 터키산 알루미늄과 강철에 대한 수입 관세를 감절토 올렸으며 [터키에 판매한]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 100대의 배치를 보류시켰다. [하지만] 터키 경제는 그전부터 압박을 받고 있었다. 터키 경제의 호황은 대규모 달러·유로 차관에 기댄 자산 거품 덕분이었다. 아르헨티나와 마찬가지로 터키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 에르도안은 오랫동안 터키 금리 인상을 반대해 왔음에도, 8월에는 리라화(₺) 가치 폭락 때문에 금리를 [기준 17.5퍼센트에서] 24퍼센트로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에르도안이 한 발 물러섰다. 9월 12일 터키 정부는 브란슨을 석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 [외교당국의] 압력에 굴복했다.” 그러나 미국 [외교당국의] 압력에 굴복했다.

터키 정부는 사우디 왕가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사우디 왕가는 미국 제국주의의 혈맹 관계는 여전히 견지한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626호 / 번역 김준호

▶ 5면으로 이어짐

미국발 증시 폭락과 무역 전쟁

경제 공황이 또다시 밀어닥칠 것인가?

강동훈

10월 10~11일에 걸쳐 미국 증시가 폭락하고 잇따라 세계 증시가 하락하면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다.

올해 신흥국 위기들이 벌어지는 중에도 미국 경제는 괜찮다고 얘기돼 왔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 경제는 약간의 골디락스 경제”라고 자화자찬했다. 너무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가장 적절한 경제 상태라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 경제가 비교적 나아진 것은 사실 미국 기업들의 세후 수익이 좋아진 덕분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12월 법인세율을 최고 35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낮췄다. 그 덕분에 올해 1~2분기 미국 기업들의 세후 수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16퍼센트나 늘어났다.

미국 경제가 나아지는 듯이 보이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올해 9월에는 기준금리를 2.25퍼센트까지 올렸다. 양적완화도 축소하고 있다. 미국 연준은 치솟은 주식 가격이나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통화 긴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금리 인상으로 증시가 악영향을 받자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연준이 미쳤다”, “날뛰고 있다”며 연준을 비난했다. 법인세 감세 등으로 미국 경제를 부양한 것을 모두 망치고 있다며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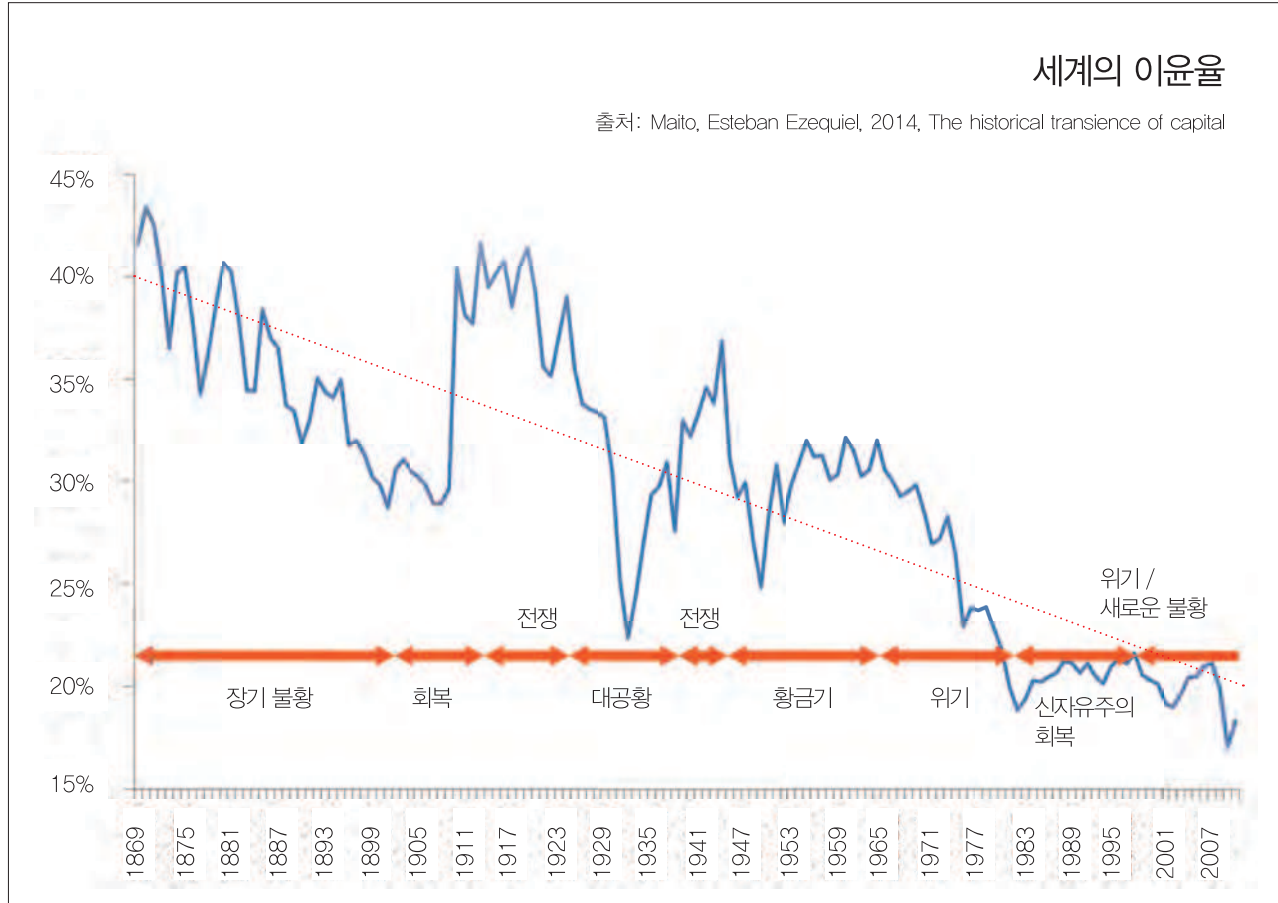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도 미국의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법인세 감세 때문에 올해 미국의 재정적자가 7790억 달러(약 882조 6070억 원)로, 약 17퍼센트(1130억 달러) 정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뉴욕 타임스>는 “내년부터 재정적자가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처럼 미국의 재정적자가 늘어나면, 시장에 새로 발행되는 미국 국채가 늘어나면서 금리를 인상(채권 가격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

요컨대, 이번 미국발 증시 추락은 금리 인상과 재정적자 확대 정책들이 미국 경제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그리고 오늘(10월 19일) 미국 증시는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로 또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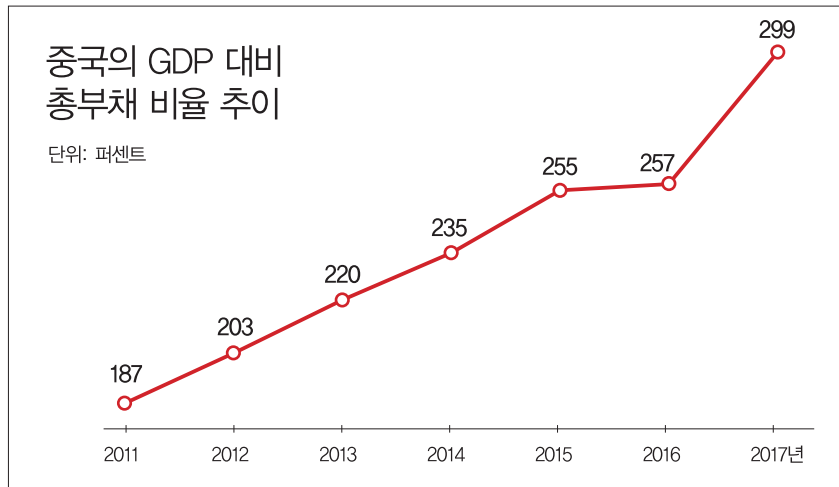
무역 전쟁과 더욱 불안정해진 중국 경제

한편, 미국이 금리를 올리자 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올해 들어 이미 여러 차례 신흥국 통화 가치가 폭락했다. 그리고 신흥국 통화 가치 하락은 (1996~1997년 벌어진 동아시아 외환 위기처럼) 연쇄적인 외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그런 위기가 벌어진다면 그것은 단지 신흥국들에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선진국들이 신흥국에 돈을 빌려 줬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세계 2위 규모로 성장한 중국 경제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막대한 부채가 있다는 것이다. 위안화 환율도 올해 계속 올라(가치 하락), 달러



회복되지 않는 이윤율 때문에 부채 의존 경제와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급증한 중국 부채는 세계 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이다

당 7위안에 가까워졌다. 조만간 환율이 7위안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최근 중국과 홍콩의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경제의 거품 문제를 야기한 부동산이 급락세로 돌아설 경우, 증시 추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이런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는 쉽지 않다. 다른 신흥국 정부들처럼 중국 정부도 딜레마에 처해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면, 위안화 가치가 하락(환율 상승)하면서, 수입품 가격이 크게 올라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물가 상승 막으려고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침체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간 무역 전쟁의 격화는 세계 경제의 주요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다.

얼마 전 미국 정부는 중국산 제품 2000억 달러어치에 대해 추가로 관세 10퍼센트를 물렸다. 내년에는 이 관세가 25퍼센트로 올라갈 예정이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산 수입품 5000억 달러어치 전체에 대해 관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작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최근까지 중국의 대미 수출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내년에 관세가 25퍼센트로 오르기 전에 미리 수입하려는 수요가 있는 데다,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올해 10퍼센트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에, 미국이 매긴 10퍼센트 관세로도 중국산 제품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 관세 인상의 효과는 내년 이후에는 중국의 대미 수출을 감소시키기 시작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전쟁은 단지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만을 목표로 삼지는 않는 듯하다. 미국의 제조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정치적 의도도 있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중국 경제에 확실히 타격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 미국 정계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국가 주석 시진핑이 헤이룽장(黑龍江) 성에 있는 국영기업을 방문해 “자력갱생”을 얘기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즉, 미중 무역 갈등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 전체에 관세를 물리는 것뿐 아니라, 환율조작국 지정과 그보다 더한 경제 전쟁으로 확대·지속될 공산이 있다.

물론 10월 18일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을 다음과 같은 말로 맹비난했다. “집요한 비관세장벽, 널

리 파진 비시장적 메커니즘, 만연한 보조금 사용, 그 외의 불공정 관행 때문에 중국과 무역 상대국들의 경제적 관계가 왜곡된다.” 앞으로 6개월간 지켜본 뒤 내년 상반기 환율보고서 발표 때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이다.

이윤율 저하와 이웃 나라 거지 만들기

그렇다면 우리는 최근의 세계경제가 왜 부채에 의존하는 성장을 하게 됐는가 하는 점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해 줬다가 미국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큰 위기로 번졌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흥국 부채가 세계경제에 커다란 위험 요소가 됐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은 부채 의존 경제가 이윤율 하락 경향 때문이라고 분석해 왔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노동만이 추가적인 가치와 이윤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경쟁 압력 때문에 기업들은 고용을 늘리는 것보다 더 빨리 기계 등의 생산수단 투자를 늘리게 된다. 이것이 이윤율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윤율이 낮아지면 기업들은 생산적 투자를 꺼리게 된다. 기업의 투자가 비교적 감소하게 되면, 금융권에 모인 돈들은 다른 부문(특히 자산시장)에서 투기적으로 이용된다. 이런 투기는 거품을 만들며 일시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곧 커다란 위기로 되돌아오곤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전쟁도 낮아진 이윤율 속에서 좀 더 많은 이윤을 차지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근린공핍화(이웃 나라 거지 만들기) 정책’이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단지 중국뿐 아니라 유럽·일본 등과도 무역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트럼프 정부는 자동차에 25퍼센트 관세를 매길 준

비를 하고 있다.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주요 국가는 중국이 아니라 일본·독일·한국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이다. 근린공핍화 정책에서는 동맹들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 갈등은 정치적 갈등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 경제 악화와 문재인 정부의 우향우

세계경제 상황의 악화는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10월 18일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퍼센트로 낮췄다. 석 달 만에 2.9퍼센트에서 0.2퍼센트 포인트 낮춘 것이다.

한국 경제는 최근 투자가 감소하면서 고용 증가세도 크게 떨어졌다. 특히,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임금 상승 부담을 피하려고 하고와 노동강도 강화 등으로 대응한 것이 ‘고용 참사’에 한몫한 듯하다. 따라서 임금을 올릴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쓰레기통에 처박았고, 주 52시간 상한제에 대응해서는 탄력 근로 확대 등으로 사용자들의 부담을 줄여 주려 하고 있다.

한편, 올해 조선업 등에서 벌어진 구조조정도 고용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됐다. 게다가 트럼프 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25퍼센트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한국은 자동차를 1년에 400만 대 정도 생산하고, 이 중 약 85만 대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가 악화하자 문재인 정부는 점점 더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혁신 성장’이나 ‘규제 완화’ 등 친기업적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도 문재인 정부의 배신에 맞서 계속 투쟁해 왔다.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라면 경제 위기는 노동자들을 더욱 사기 저하시키고 더욱 분열시킬 수 있다. 그러나 경사노위 참가를 의결하려면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가 무산된 것은 상당수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환상을 갖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가 닥친다면 노동자들의 투쟁은 폭발적으로 터져나올 수도 있다.

혁명적 좌파는 분출할지도 모를 노동자 투쟁을 확실하게 분출토록 하는 데 일조할 수 있어야 한다.

Q 용어설명

양적완화

양적완화 정책은 제로 금리가 된 후에도 중앙은행이 국채나 주택담보대출 채권 등을 매입해 금융 시장에 돈을 주입하는 정책이다. 그러면 시중 금리가 더욱 떨어져 기업들이 투자하기 쉬워진다.

환율과 통화 가치

만약 한국 원화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오르면, 달러 대비 원의 통화 가치는 하락한 것이다.

초등돌봄전담사

전일제로 전환하고 처우 개선하라

문재인 정부는 지난 4월 4일 ‘온종일 돌봄 정책’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초등학교돌봄(2017년 현재 24만 명)과 마을돌봄(2017년 현재 9만 명) 대상 학생을 각각 10만 명씩 늘려, 53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0월 12일 정부는 2018년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회부총리 산하에 ‘온종일 돌봄체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돌봄전담사 1만여 명이 신규 채용될 듯하다.

그런데 현재 업무를 맡고 있는 초등돌봄전담사는 초단시간제 비정규직이다. 박근혜 정부가 2014년부터 초등 1~2학년 돌봄교실 확대를 추진하면서 비용을 아끼려한 결과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초등돌봄전담사 약 1만 2000여 명 중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인 전일제 노동자는 18퍼센트에 불과하다.

시간제로 일하다 보니 노동자들은 임금이 낮고, 다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각종 수당도 동일하게 받지 못한다. 그래서 현재 근무 중인 초등돌봄 노동자들은 기존 노동자들의 조건과 처우부터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전일제 근무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초등돌봄교실과 서비스 제공 시간을 확대하겠다고만 하지,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으려 하지는 않는다. 5월 14일 교육부 발표를 보면, 신설 돌봄교실 1실 당 시설 관련 예산은 2017년 대



노동자 처우 개선해야 양질의 돌봄이 가능하다

비 3배가 증가하지만 기존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내용은 전혀 없다.

이미 각 시도교육청은 신규 채용 계획을 발표했는데, 기존의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인력 충원 계획을 수립한 강원, 경기, 대전, 인천 교육청은 하루 2~5시간제 돌봄전담사를 고용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충북지역의 한 초등돌봄 노동자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돌봄 확대 정책을 얘기하지만 양적인 확대만 고집하며 질적 향상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간제 일자리는 양질의 돌봄교실을 운영하기 어렵게 만든다. 노동자들은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 시간 외

에도 “수업 준비를 비롯한 돌봄교실 관련 행정업무·업무 협의·관리 및 정리 등을 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런데 근무시간에는 오직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 시간만 포함될 뿐이다. 준비시간, 각종 업무시간, 상담시간 등은 빠져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돌봄전담사들은 수업 준비와 행정 업무를 집에 가져가서 처리하는데, 이 시간은 무료 노동이다.

무료 노동

따라서 하루 3~5시간 근무로는 양질의 돌봄을 제공할 수 없다. 질 좋은 돌봄교실을 운영하려면,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늘어야 한다.

돌봄 노동자들은 저임금의 열악한 처우에도 질 좋은 돌봄교실을 운영

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해 왔다. 해마다 실시하는 조사에서 학부모 만족도는 90퍼센트를 웃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소속 초등돌봄 노동자들은 10월 17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10월 20일에 초등돌봄노동자대회를 청와대 앞에서 개최하고, 돌봄 일자리를 하루 8시간 전일제 일자리로 전환하고 처우를 개선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10월 20일 집회 이후에도 계속 투쟁해 나갈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 돌봄 일자리를 전일제로 전환하고 노동자들의 처우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 그럴 때 제대로 된 온종일 돌봄을 만들 수 있다.

신정환

전교조 인정하고 성과급·교원평가 폐지하라

오는 10월 24일은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범외노조임’ 통보를 한 지 5년이 되는 날이다. 전교조 지도부는 범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면서 올해 6월부터 단식과 삭발 농성을 했고, 7월 6일 조합원 연가 투쟁과 9월 12일 교사대회에는 수천 명이 참가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바로 전교조 범외노조를 철회하겠다”던 약속을 회피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선거 이후 정치적 부담이 적은 시기에 [전교조 범외노조를] 직권취소하겠다”고 했지만,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뒤통수를 쳤다.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 국회에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기준을 통한 법 개정으로 해결하겠다고 말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범외노조화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더러운 사법 거래의 결과였다. 또 애초에 범외노조화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추진된 것인 만큼 철회도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한다.

정부는 교사들이 이행되기를 바라

던 대선 공약 1위인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도 내팽개쳤다. 문재인은 “공직 사회에 강요됐던 성과 중심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당선 이후 성과급은 유지하고 차등 지급불만, 그것도 딱 이명박 정부 수준(7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으로 축소했다.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는 교육 부문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시간이 갈수록 정부의 교육 정책에서 개혁 과제는 사라지거나 부차화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 양성” 같은 게 강조된다. 이는 산업과 경제 성장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뜻하는 것으로, 교육에서도 친기업적 방향이 강화되는 것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첫 안건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인재 성장 지원 계획’을 다뤘다.

반면 자사고·특목고 폐지 공약은 흐지부지되고 있고, 대입제도 개편안은 수능 강화를 선택하며 누더기

가 됐다. 기간제 교사와 학교비정규직 교사들의 차별은 전혀 시정되지 않았고, 교사 수를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교사들을 더욱 쥐어짜려고 한다.

개혁은 나몰라라

그런데 전교조 지도부는 10월 20일 총력투쟁을 사흘 앞둔 10월 17일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비공식 만남을 했다. 이 만남에서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전교조 범외노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정부 입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했고, 성과급·교원평가 문제는 앞으로 협의해 나가자는 얘기만 오갔다고 한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이미 예상됐던 바다. 지방선거 이후에 전교조 지도부와 정부는 몇 차례 만났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약속은 지킬 수 없지만 만남은 하자’는 식의 태도를 취해왔다. 지도부를 협상 테이블에 앉혀 투쟁의 발목을 잡는 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교육 개혁이나 범외노조 문제 해결 등의 약속을 내팽개친 것은 최근 친기업 정책을 강화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 지도부는 정부와의 만남이나 대화보다 투쟁 조직에 힘을 쏟아야 한다.

정부의 개혁 실패에 대한 실망과 분노는 기층에 누적되고 있고, 진정한 개혁을 바라는 기층의 바람은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전교조의 성과급 균등분배 참가자 수가 9만 5575명에 달한다. 이 숫자는 2016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징계(최대 파면) 엄포를 했음에도 성과급 균등분배 명단 공개 참가자 수도 1만 1751명에 달했다.

이런 변화의 바람을 실현하려면 전교조 내 투사들은 기층 조합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투지를 고무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들의 투쟁과 연대를 성장시킬 정치와 조직도 건설해야 한다.

정선영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

“자회사는 차별 여전한 또다른 하청”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가 10월 15일 파업을 하고 직접고용 촉구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이날부터 지회별로 돌아가며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요구를 무시하고 ‘부분 자회사’ 전환 안을 내놓은 LG유플러스 원청에 불만이 높다. 사측은 최근 부분 자회사 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제시했다. 2020년에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2300명 중 34.7퍼센트인 800명을, 2021년에 21.7퍼센트인 500명을 순차적으로 자회사를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2년 뒤부터 절반 가량만을 전환하겠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일부 노동자들은 특히 자회사 방식에도 분노를 표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노동자 700여 명은 “반쪽 정규직 반대한다”, “부분자회사 반대한다”고 힘차게 외쳤다.

관악동작지회의 한 노동자는 연단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LG유플러스는 하도급 구조를 계속 고수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LG유플러스가 ‘자회사 수준’의 복지를 해 주겠다, ‘연말에 자회사 수준의 성과급을 나눠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껌데기만 있는 반쪽 짜리, (실상은) 비정규직 자회사입니다. 동지 여러분, 인터넷 약정만도 못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대열에서도 일부 노동자들이 “지긋지긋합니다!” 하고 호응했다.

새롭게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활력도 느낄 수 있었다. 집회 사회자는 올해 파업하고 투쟁하는 와중에도 노조 가입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신규 지회들이 늘고 있다고 소개했다.

새롭게 지회를 건설한 해운대지회 조합원은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우리의 피와 땀으로 참 좋은 건물을 세워줬네요. LG유플러스는 조삼모사 같은 안으로 우리를 흔들지 마십시오!”

집회에서 만난 노동자들은 부분 자회사 안에 대해 “고민할 수도 없는 안”이라고 반대 의지를 밝혔다. 한 노동자는 부분 자회사 안이 “누구는 자회사 되고, 누구는 안 되면 노동자들이 분열할 수 있다”며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자회사가 차별을 유지하는 방식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서울 중랑 지역에서 노동자는 말했다. “자회사는 어쨌든 차별이 있는 겁니다. SK를 보면 자회사는 그냥 또 다른 하청입니다. 원청에서 사람이 내려오는 것 말고는 다 똑같은 겁니다.”

울산에서 올라온 노동자도 같은 생각이었다. “KT나 SK를 보면, 자회사가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LG가 자회사를 고집하는 걸 보면, 정권이 바뀌면 다시 우리를 내치려는 여지를 언제든지 남겨두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탁사가 직고용 되고도 저렇게 차별 받는데, 자회사는 어떻겠습니까?”

노동자들의 비판은 옳다. LG유플러스 사측은 아비한 꾀수를 중단하고 당장 직고용 정규직화 하라.

양효영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외친다

노동3권 보장하라, 노조법 2조 개정하라

장우성

코카콜라를 운송하는 화물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 넘게 600킬로미터를 운행한다. 10년간 상품 가격은 2배나 올랐지만, 운송료(화물 노동자들의 임금)는 전혀 오르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화물연대에 가입해 운송료 현실화를 요구하자, 사측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항의해 노동자들은 한 달 넘게 노숙하며 대체 차량 투입을 막는 등 강경하게 투쟁했다. 화물 노동자들의 상경투쟁을 앞두고 사측이 해고 통보를 철회해 이 투쟁은 일단락됐다.(그러나 낮은 운송료 개선은 이후 과제로 남았다.)

그 과정에서 사측과 이를 비호하는 경찰은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탄압했다. 이 횡포를 정당화하는 명분은 '화물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처럼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다른 노동자들처럼 노무를 제공함에도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우리 나라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계 추산으로 250만 명에 이른다. 비정규직이 급증하던 1997년 경제 위기를 전후로 특수고용직도 대폭 늘었다. 기업주들이 인력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장비 구입비와 유지비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자 한 결과다.

건설기계, 대리운전,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방송 작가, 간병 노동자 등 다양한 직종에 특수고용이 산재해 있다. 특정 기업에 고용되지 않고 스마트폰 앱으로 일감을 받는 배달대행,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이른바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들도 특수고용 노동자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건설기계 노동자 박재순 씨는 말했다. "노조를 만



특수고용직도 노동자다 노동자인데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이 250만 명이나 된다

든 지 1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건설 현장에선 노조를 부정하며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맘대로 위반해요. 체불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노동부에서 노동자가 아니라며 진정조차 받지 않습니다."

대리운전 노동자 이창배 씨도 부당한 현실에 분노를 토했다. "하루 10~12시간씩 심야 장시간 운전, 과로, 수면 부족,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면서도, 월 평균 수입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노동부는 '전속성' 운운하면서 설립신고증을 내주지 않아요."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특수고용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넘어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는 이를 위해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

용하겠다고도 했다. 노동자들은 문제인 정부 하에서 기본권 보장 요구가 실현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1년 반이 다 되도록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는 대리운전노조의 노조 설립신고와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 확대 등 쟁점에서 '전속성' 잣대를 들이대며, 사용자가 하나인지 여럿인지에 따라 누구는 노동자이고 누구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

노동자가 한 업체에 전속돼 일해야 한다는 '전속성'의 기준은 특수고용 노동자를 대부분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가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대책'에서 명시한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송 종사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정부 대책이 적용됐다.

그 내용도 산재보험 특례 가입 적용

과 경제법적 보호 대책에 국한된 것이었다. 특례 가입이 적용된 특수고용 노동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다른 노동자들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 경제법적 보호 대책은 해고와 부당한 처우 등을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제하겠다는 내용인데, 현실에선 거의 유명무실하다.

선별적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대책도 그 틀 안에서 산재보험 가입 특례 대상을 2~3개 업종 늘리는 수준에 머물렀다. 대리운전기사는 2016년 산재 가입 적용 대상에 포함됐지만, '전속' 조건 등의 문제 때문에 전체 20여만 명 중 고작 8명만(!) 산재보험에 가입했다.

이런 선별적·제한적 보호 대책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턱없이 모자라다. 현재 특수고

용직 중 산재보험 가입 특례 적용 대상 업종은 9개에 불과하다.(2015년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조사 결과, 특수고용 직종이 102개인데 말이다!) 적용 대상자 중 산재보험 가입률도 11.7퍼센트 수준이다.

경제법적 보호대책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특수고용 노동자 관련 사건 접수는 109건에 그쳤고 그조차 2013년 이후에는 단 한 차례도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단결권만 우선 보장하는 식의 제한적 방식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택배연대노조는 2017년 말 노조 설립필증을 받았지만, CJ대한통운은 여전히 '택배기사는 노동자가 아니라'며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을 요구한다. 특히 문제인 정부가 '노조할 권리 보장'을 약속한 만큼, 노조법 2조의 근로자 개념에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하도록 개정하라고 요구한다.

그런데 이 쟁점을 다루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 최근 제출된 공익위원 합의안은 단결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명확히 약속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정부가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린다.

이런 분노가 10월 20일 특수고용 노동자 총력 투쟁으로 모이고 있다. 화물, 건설기계, 대리운전,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학습지 교사 등 다양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한데 모여 노동3권 보장과 노조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를 발판 삼아 투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노조할 권리 보장 의지가 없는 문재인 정부

10월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 소속 공익위원들이 노동기본권 관련 입법안에 합의했다. 이달 말까지 논의를 거쳐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한다.

공익위원 합의안은 단순한 초안이 아니다. 공익위원들은 위원회 구성의 과반을 차지하고(13명 중 7명), 매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대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다.

그런데 그 내용은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이행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말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형편없다.

우선,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전혀 보장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특히 이 문제가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며 연내 입법을 강조해 왔는데, 결국 사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알맹이가 빠졌다. "향후 ...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추상적 말로 변죽만 울린 수준이다.

오래전부터 ILO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한 권고를 또다시 무시하며 장기과제로 미뤄 두겠다는 뜻이다.

둘째,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형식적 노조 인정(단결권) 문제로만 국한했는데, 그조차 어떤 법·제도를 언제 어떻게 개정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 해고자 복직 등)도 언급이 없다.

셋째, 노동조합 설립신고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의 개입 최소화"를 제시했다.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돼 온 행정 방침을 폐기하고 신고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이다.

넷째, 정의행위의 "대등성을 확보"하겠다는 등의 대목에서는 상당한 위협성도 엿보인다. 이 말은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요구할 때도 사용되지만, 반대로) 사용자들이 노조의 정의에 맞선 '대항권'을 주장할 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가 "사용자 대항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해고는 쉽게 하고 파업은 더 어렵게 만드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추진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지금도 사용자들은 쟁의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고 대체근로(즉, 파업 파괴 행위)를 무제한 허용하자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발행하는 격월간지 《사회적 대화》 최근호에서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렇게 주장한다: ILO 기본협약의 비준과 이행보다 중요한 것은 "노사정 3자 주의", 즉 사회적 대화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노동계뿐 아니라 사용자

들의 의중도 살펴 "현실에서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루려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 헌법과 ILO 기본협약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노사정 대화의 거래 대상으로 삼아 노동자들에게 양보와 후퇴를 강요하는 것이다.

이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에 기대서는 결코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 그것은 노동자들이 단호히 싸워서 얻을 권리들이다.

박설

※ 웹사이트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